

# 상용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분석

성재민\*

## I. 머리말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1998년 급락한 이래 2000년 47.9%까지 하락했으나 2002년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10년 연평균 상용직 비중은 59.4%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청 KOSIS에서 관련 통계가 이용 가능한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상용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황덕순(2010)의 연구는 이 영역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용직 증가는 경기순환과는 관계가 없는 추세 자체의 증가여서 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노동경제학 연구 전통에서 노동수요 측 요인들로 간주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20~30% 정도로 크지 않다. 전 산업, 전 직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 관리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극심한 고용침체가 있었던 2009년은 사업체 규모간 분포변화가 상용직 증가와 관련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제도변화는 상용직 증가의 시점과 맞지 않아 중요한 원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전 산업, 전 직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노동공급 측에서 나타난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고학력자의 증가가 상용직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학력자는 아무래도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어서 저학력자가 많을 때와는 시장에서 생성되는 일자리의 특성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황덕순(2010)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용직 증가에 대한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노동공급 측 요인의 설명력을 검토해 볼 것이다.

종사상 지위와 정규직 여부를 교차해 분석할 경우 상용직에도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용직이면서 비정규직인 일자리에 1년 이상 계약기간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과 용역직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꼭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교차해 상용직 증가에서 어떤 식의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상용직 증가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증감의 추세를 요약한다. 제Ⅲ장에서는 상용직 증가에 대한 노동공급 측 요인의 설명력을 검토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상용직이 증가해 온 2003년 이후 시기를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결합해 분석할 때 산업, 직종, 근로조건별로 어떤 변화가 발견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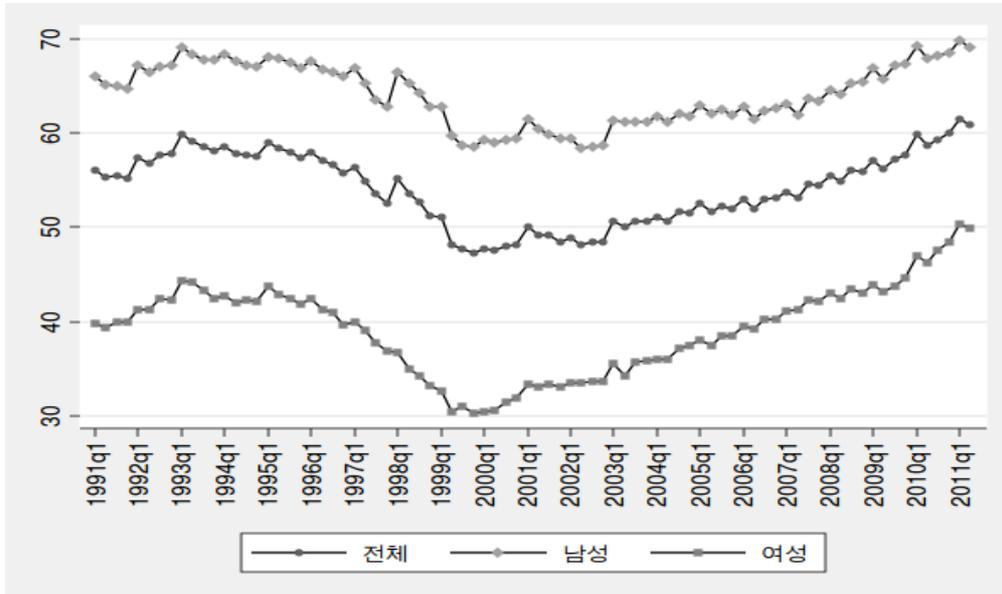
## Ⅱ. 종사상 지위별 증감의 추세

[그림 1]은 지난 20년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 추이를 분기별로 요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은 50% 후반에 머무르다가 1997년 정도부터 확연하게 하락하여 2002년 하반기까지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2003년부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2011년 1사분기에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던 1993년 1사분기보다도 더 상용직 비중이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상승추이가 더 가팔랐다. 상승 시점도 여성이 더 빨라 2000년 3사분기부터는 이미 상승추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2003년 1사분기에 급등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임금근로자 숫자는 2000년 이후로는 감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중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서 상용직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전체로 보면 1993년 2사분기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00년 1사분기까지 상승, 2004년 2사분기 정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다른 시기는 비슷하지만 하락의 시점이 다소 빠른 2002년 1사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2003년 1, 2, 3사분기에 일시적 급등기가 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했다. 다만,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지만 임시직 숫자도 꾸준히 감소한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자의 증가만큼 비례해서 임시직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보다 못한 크기로 시기에 따라 증감을

[그림 1]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성별 비중 추이(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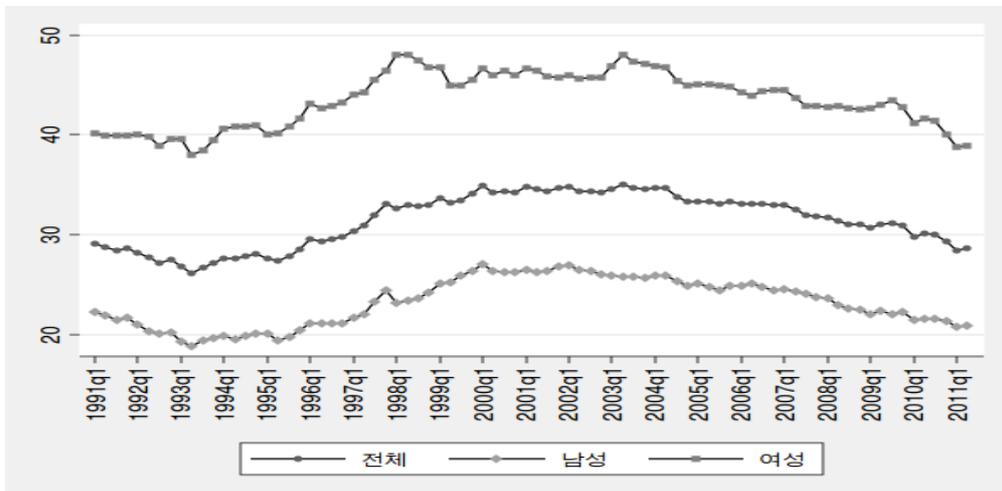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거듭하고 있다. 연평균 수치로 보면 임시직 숫자는 2007년 5,172천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성별 비중 추이(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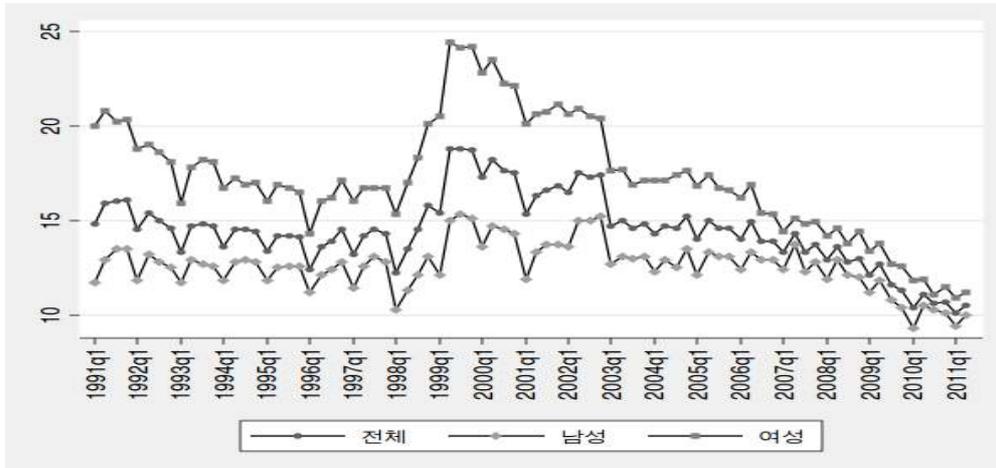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성별 비중 추이(분기)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의 비중은 계절과 경기에 따라 다른 종사상 지위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추세적 변화를 육안으로만 보고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1997년 이전에는 꾸준히 하락해 왔고, 외환위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는 꾸준히 하락해 왔다. 2003년에 급락하는 시점이 있는데 아마 카드사태의 영향일 것이다. 이 시기의 급락 때문에 남성의 경우 임시직 비중이 이 시기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그림을 보면 일용직은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일 뿐, 1991년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는 비중 면에서 감소하는 것이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략 2007년이나 2008년 정도의 비중이 과거 1996년 비중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1996년까지는 비중의 축소이지 일용직 숫자의 감소는 아니었는데 반해 2004년 이후로는 꾸준히 숫자도 감소해 왔다는 점이다. 즉, 일용직 감소는 지금이 더 가파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종사상 지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정의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상용직 증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려면 통계청에서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야 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었으면 상용직으로 분류하지만, 퇴직금 및 성과급 등 제 수당을 받을 수 없거나 회사의 인사관리 적용 대상이 아닌 형태로 고용된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상용직이므로, 흔히 볼 수 있는 1년 계약직이면 상용직인 것이다. 회사가 직접 고용할 수도 있지만, 파견이나 용역으로도 1년 계약하면 상용직으로 분

<표 1>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근로복지 적용률

(단위: %)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전체 중 비중
고용보험	2004. 8	79.7	88.7	27.4	23.5	7.6	3.0	52.1
	2010. 8	82.8	88.0	29.2	25.0	7.5	4.3	58.6
퇴직금과 상여금	2004. 8	96.0	87.1	2.4	2.0	0.1	0.0	50.4
	2010. 8	97.8	86.8	9.6	4.1	1.9	0.3	59.2
유급휴가	2004. 8	83.7	72.0	8.8	7.9	2.9	0.4	45.8
	2010. 8	93.7	86.9	12.7	11.3	1.0	0.7	58.7

주: "퇴직금과 상여금" 항목은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 즉 2004년 8월 임시 정규직 2.4%만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응답.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류된다. 이로 인해 상용직 증가가 상용직이면서 정규직인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하는지, 상용직이면서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된 사람 중에도 임시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시직이라고 해서 전부 비정규직인 것이 아니고 임시 정규직이 있을 수 있다. 비중상 축소되고 있는 것이 임시 정규직인지 임시 비정규직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시 정규직은 정의상 고용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칙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ILO나 OECD에서는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으로 정의한다(성재민·이시균, 2007). 비공식 고용으로 분류되려면 사회보험, 소득세에서도 누락되어야 하는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의 틀 안에 있을 리 없다. <표 1>을 보면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은 80%가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임시 정규직은 2004년 8월 27.4%, 2010년 8월 29.2%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예나 지금이나 비공식 고용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시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으며, 일용직은 거의 다 비공식 고용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를 떠나 매우 후진적인 고용관계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표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 세부 형태별로 2~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6.5%p나 증가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하는 분포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표 2>를 보면 한시근로자의 대부분은 2003년 8월에는 임시·일용직이었지만, 2010년 8월에는 상용직임을 알 수 있다. 한시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일용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 및 2년 이상 장기계약이 감소하는 대신 1년 계약이 대폭 증가하는 기간제 노동시장

의 재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일용직 기간제가 감소한 것이다. 상용직 기간제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임시직 기간제는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시근로자 다음으로 상용직에서 규모가 큰 것은 용역 근로자다. 이 역시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임시직, 일용직에서는 숫자 변동이 거의 없었다. 파견직도 상용직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시 및 일용직인 파견직은 변화가 미미했다. 이를 보면 상용직 증가에서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시직 중에서도 한시근로자가 가장 많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간제의 급증이다.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 시간제 근로자 증가 대부분이 임시직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임시 비정규직에서 2003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았는데 2010년 8월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변화하였다. 일용 비정규직은 한시근로자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일일근로, 시간제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에만 해도 일용 비정규직에서 가장 많은 고용형태는 한시근로자였지만, 2010년 8월에는 일일근로가 가장 많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비정규 유형별 임금근로자

(단위: 천 명,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한시근로자	2003. 8	903 (30.0)	1,071 (35.6)	1,039 ( 34.5)	3,013
	2010. 8	1,721 (52.4)	1,266 (38.6)	294 ( 9.0)	3,281
(기간제)	2003. 8	757 (31.5)	699 (29.1)	947 ( 39.4)	2,403
	2010. 8	1,479 (59.3)	856 (34.3)	160 ( 6.4)	2,494
파견	2003. 8	44 (44.7)	41 (42.0)	13 ( 13.3)	98
	2010. 8	139 (66.1)	62 (29.6)	9 ( 4.3)	211
용역	2003. 8	105 (30.5)	183 (53.0)	57 ( 16.5)	346
	2010. 8	377 (62.0)	186 (30.6)	45 ( 7.4)	608
특수고용	2003. 8	94 (15.7)	403 (67.1)	104 ( 17.3)	600
	2010. 8	10 ( 1.8)	532 (90.2)	48 ( 8.1)	590
가정내	2003. 8	7 ( 4.4)	50 (29.9)	109 ( 65.7)	166
	2010. 8	3 ( 4.6)	7 (10.0)	60 ( 85.4)	70
일일	2003. 8	- ( - )	- ( - )	589 (100.0)	589
	2010. 8	- ( - )	- ( - )	870 (100.0)	870
시간제	2003. 8	10 ( 1.0)	392 (42.2)	528 ( 56.8)	929
	2010. 8	82 ( 5.0)	943 (58.2)	595 ( 36.7)	1,620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교차 분석해 추이를 살펴보자. 남성 상용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면 <표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성장은 상용 비정규직에서의 증가폭이 더 컸다. 2005년과 2006년은 별 변화가 없다가 2007년 8월 이후로는 상용 정규직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임시직은 정규직 쪽에서 꾸준히 규모가 감소해 왔다. 임시 비정규직은 2002~04년만 비중의 증가가 뚜렷하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해 왔다. 일용 정규직은 2002~03년 사이에만 하락했을 뿐 그 이후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일용 비정규직은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고용침체를 겪은 후 2010년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남성 상용 정규직은 2008년 3월에 비해 2009년 3월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숫자가 매우 적어 안정적인 시계열을 확보할 수 없는 일용 정규직을 뺀 나머지는 전부 숫자가 감소하였다. 상용직과 정규직은 위기 시에도 입직은 감소하지만 이직 역시 감소해 근속기간이 증가하고 총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황덕순, 2010; 성재민, 2011). 다른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은 해고가 증가해 이직이 증가하므로 규모가 감소했다.

고용이 회복기에 들어선 2010년 3월과 2009년 3월을 비교하면 역시 상용 정규직의 증가가 뚜렷하다. 남성 임금근로자수가 234천 명 늘었는데 상용 정규직은 293천 명이 늘어

<표 3> 남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전체
8 월 조 사	2002. 8	4,324 (52.4)	558 ( 6.8)	1,666 (20.2)	511 (6.2)	329 (4.0)	869 (10.5)	8,258
	2003. 8	4,433 (53.5)	671 ( 8.1)	1,457 (17.6)	653 (7.9)	107 (1.3)	963 (11.6)	8,283
	2004. 8	4,296 (50.6)	1,057 (12.4)	1,355 (16.0)	750 (8.8)	106 (1.2)	926 (10.9)	8,489
	2005. 8	4,535 (52.2)	938 (10.8)	1,305 (15.0)	771 (8.9)	106 (1.2)	1,026 (11.8)	8,682
	2006. 8	4,656 (52.3)	936 (10.5)	1,394 (15.7)	784 (8.8)	153 (1.7)	985 (11.1)	8,909
	2007. 8	4,803 (52.0)	1,121 (12.1)	1,396 (15.1)	809 (8.8)	130 (1.4)	977 (10.6)	9,235
	2008. 8	5,186 (55.4)	940 (10.0)	1,318 (14.1)	796 (8.5)	163 (1.7)	964 (10.3)	9,366
	2009. 8	5,464 (57.4)	927 ( 9.7)	1,222 (12.8)	884 (9.3)	147 (1.5)	870 ( 9.1)	9,515
3 월 조 사	2010. 8	5,677 (58.0)	1,010 (10.3)	1,313 (13.4)	794 (8.1)	144 (1.5)	845 ( 8.6)	9,783
	2007. 3	4,570 (50.2)	1,099 (12.1)	1,467 (16.1)	802 (8.8)	101 (1.1)	1,067 (11.7)	9,106
	2008. 3	5,002 (54.1)	967 (10.5)	1,262 (13.7)	878 (9.5)	131 (1.4)	998 (10.8)	9,237
	2009. 3	5,309 (57.0)	878 ( 9.4)	1,226 (13.2)	833 (8.9)	147 (1.6)	915 ( 9.8)	9,307
	2010. 3	5,602 (58.7)	983 (10.3)	1,263 (13.2)	774 (8.1)	122 (1.3)	797 ( 8.4)	9,541
	2011. 3	5,721 (58.2)	1,134 (11.5)	1,210 (12.3)	808 (8.2)	144 (1.5)	807 ( 8.2)	9,8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상용 비정규직은 105천 명 늘었다. 그 외에는 임시 정규직에서 37천 명 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하면 상용 정규직은 119천 명 늘었고, 상용 비정규직은 151천 명 늘어 최근의 증가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임시 비정규직도 34천 명 늘었다.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도 늘었고, 임시 정규직만 감소했다. 이와 같이 상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 회복기에 2년 연속 발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부로 쪼개서 집단별 증가를 분석해 보면 시기별로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2년 8월과 2010년 8월 두 시점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자 규모가 남성은 1,525천 명, 여성은 1,493천 명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상용 정규직이 1,353천 명, 상용 비정규직은 452천 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상용 정규직이 869천 명, 상용 비정규직은 624천 명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상용 정규직 중심의 성장이 뚜렷하지만 여성은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남성 상용 정규직은 2002년 8월 대비 31.3% 증가했고, 상용 비정규직은 81.0% 증가했다. 여성 상용 정규직은 50.3% 증가했고 상용 비정규직은 255.7%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은 남성, 여성 둘 다 감소했고, 임시 비정규직은 남성 283천 명, 여성 661천 명 증가해 역시 여성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종합하면, 여성은 상용 정규직도 많이 증가했지만 남성과 달리 상용 비정규직과 임시 비정규직의 증가가 더 중요한 고용 증가 원인이었다.

<표 4> 여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전체
8 월 조 사	2002. 8	1,726 (29.9)	244 ( 4.2)	1,750 (30.3)	878 (15.2)	394 (6.8)	780 (13.5)	5,772
	2003. 8	1,751 (29.8)	382 ( 6.5)	1,643 (28.0)	1,119 (19.1)	152 (2.6)	819 (14.0)	5,866
	2004. 8	1,792 (29.4)	556 ( 9.1)	1,489 (24.4)	1,219 (20.0)	153 (2.5)	887 (14.6)	6,096
	2005. 8	1,878 (29.9)	575 ( 9.1)	1,498 (23.8)	1,304 (20.8)	163 (2.6)	868 (13.8)	6,286
	2006. 8	1,983 (30.8)	667 (10.4)	1,532 (23.8)	1,308 (20.3)	175 (2.7)	777 (12.1)	6,442
	2007. 8	2,128 (32.0)	711 (10.7)	1,540 (23.2)	1,299 (19.5)	183 (2.8)	785 (11.8)	6,647
	2008. 8	2,312 (34.3)	669 ( 9.9)	1,488 (22.1)	1,368 (20.3)	191 (2.8)	709 (10.5)	6,737
	2009. 8	2,365 (34.0)	716 (10.3)	1,343 (19.3)	1,668 (24.0)	184 (2.6)	689 ( 9.9)	6,964
	2010. 8	2,595 (35.7)	868 (11.9)	1,477 (20.3)	1,539 (21.2)	156 (2.2)	630 ( 8.7)	7,265
3 월 조 사	2007. 3	2,057 (31.0)	706 (10.7)	1,612 (24.3)	1,307 (19.7)	151 (2.3)	792 (12.0)	6,625
	2008. 3	2,300 (34.0)	629 ( 9.3)	1,486 (22.0)	1,397 (20.7)	176 (2.6)	768 (11.4)	6,756
	2009. 3	2,377 (35.1)	610 ( 9.0)	1,470 (21.7)	1,412 (20.9)	173 (2.6)	726 (10.7)	6,768
	2010. 3	2,495 (35.3)	846 (12.0)	1,482 (20.9)	1,458 (20.6)	155 (2.2)	640 ( 9.0)	7,075
	2011. 3	2,723 (37.6)	964 (13.3)	1,336 (18.5)	1,428 (19.7)	159 (2.2)	629 ( 8.7)	7,2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I. 근로자 특성 변화의 설명력 검토

모든 일자리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야 만들어진다. 구인자가 아무리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를 노동시장에 내놓아도 구직자가 오지 않는다면 빈 일자리로 남게 마련이다.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들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고, 적어도 사회보험이 되고 유급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특성도 보다 고학력자들의 특성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공석을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안에서 학력 구성이 바뀌는 것, 연령 구성이 바뀌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상용직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용직에는 압도적으로 저학력자가 많은데, 저학력인 사람들은 대체로 고령자에 많으므로, 이들의 은퇴는 자연스럽게 일용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역시 상용직 비중이 증대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표 5>의 학력별 증감을 보면 고졸 미만에서는 상용 정규직 비중이 2.1%p 감소했고, 고졸에서는 소폭 증가했다(0.9%p). 전문대졸에서는 5.5%p 증가했고, 대졸에서는 2.7%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상용직이 4.5%p 증가했으나, 인구비중이 크지 않은 전문대졸자

<표 5> 남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학력별 증감(2003.8~2010.8)

(단위: 천 명, %)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2003.8	상용 정규직	311 ( 24.5)	1,734 ( 46.7)	521 ( 62.3)	1,867 ( 75.8)	4,433 ( 53.5)
	상용 비정규직	82 ( 6.5)	246 ( 6.6)	85 ( 10.2)	258 ( 10.5)	671 ( 8.1)
	임시 정규직	285 ( 22.4)	838 ( 22.6)	142 ( 17.0)	192 ( 7.8)	1,457 ( 17.6)
	임시 비정규직	140 ( 11.0)	340 ( 9.2)	59 ( 7.1)	115 ( 4.7)	653 ( 7.9)
	일용 정규직	25 ( 2.0)	70 ( 1.9)	7 ( 0.8)	5 ( 0.2)	107 ( 1.3)
	일용 비정규직	428 ( 33.7)	484 ( 13.0)	23 ( 2.8)	28 ( 1.1)	963 ( 11.6)
	전 체	1,271 (100.0)	3,712 (100.0)	836 (100.0)	2,464 (100.0)	8,283 (100.0)
2010.8	상용 정규직	264 ( 22.4)	1,853 ( 47.6)	895 ( 67.8)	2,664 ( 78.5)	5,677 ( 58.0)
	상용 비정규직	140 ( 11.9)	395 ( 10.2)	138 ( 10.4)	338 ( 10.0)	1,010 ( 10.3)
	임시 정규직	213 ( 18.1)	743 ( 19.1)	172 ( 13.0)	185 ( 5.4)	1,313 ( 13.4)
	임시 비정규직	184 ( 15.6)	367 ( 9.4)	72 ( 5.5)	170 ( 5.0)	794 ( 8.1)
	일용 정규직	38 ( 3.2)	88 ( 2.3)	7 ( 0.5)	12 ( 0.4)	144 ( 1.5)
	일용 비정규직	336 ( 28.6)	445 ( 11.4)	38 ( 2.9)	26 ( 0.8)	845 ( 8.6)
	전 체	1,176 (100.0)	3,891 (100.0)	1,321 (100.0)	3,395 (100.0)	9,78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를 빼면 소폭의 증감만이 있어서 원래부터 상용 정규직 비중이 높았던 전문대졸과 대졸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력 분포가 이동한 것이 상용직 증가에서 중요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 상용 비정규직의 숫자는 늘었지만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졸 미만과 고졸에서는 숫자와 비중 양면에서 상용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은 모든 학력에서 비중이 줄었다. 임시 비정규직은 전문대졸에서만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나 숫자는 전문대졸에서도 늘었다. 일용 비정규직은 원래 저학력에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감소하였다. 특히 고졸 미만에서 그렇다. <부표 1>에서는 2009년 3월과 2011년 3월 간 나타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5>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고학력 집단만이 아니라 고졸 집단에서도 상용직 비중이 많이 늘었다. 또한 상용 비정규직도 저학력 집단만이 아니라 전문대졸, 대졸 이상에서도 비중이 많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상용직이 많이 늘었지만, 각 학력 집단 안에서도 상용직이 대폭 늘어 남성과는 달리 학력간 분포가 고학력자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가 상용직 증가에서 갖는 설명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임시 정규직은 대졸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 집단에서 숫자가 줄었고, 비중은 모든 학력에서 줄었다. 임시 비정규직은 모든 학력 집단에서 숫자가 늘었으나 비중은 저학력 집단에서만 증가했다. 일용직은 워낙 숫자가 적은 고학력자 집단에서는 유지되는 듯 보이나 실제로도 그런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저학력 집단에서는 감소추세인 것이 뚜렷이 관찰된다.

<표 6> 여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학력별 증감(2003. 8~2010. 8)

(단위: 천 명, %)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2003. 8	상용 정규직	185 ( 12.5)	637 ( 25.0)	350 ( 45.1)	579 ( 54.9)	1,751 ( 29.8)
	상용 비정규직	55 ( 3.7)	139 ( 5.4)	86 ( 11.1)	101 ( 9.6)	382 ( 6.5)
	임시 정규직	466 ( 31.4)	815 ( 31.9)	203 ( 26.2)	159 ( 15.1)	1,643 ( 28.0)
	임시 비정규직	298 ( 20.1)	514 ( 20.1)	112 ( 14.4)	194 ( 18.4)	1,119 ( 19.1)
	일용 정규직	72 ( 4.8)	72 ( 2.8)	4 ( 0.5)	4 ( 0.4)	152 ( 2.6)
	일용 비정규직	409 ( 27.5)	373 ( 14.6)	21 ( 2.7)	16 ( 1.5)	819 ( 14.0)
	전 체	1,485 (100.0)	2,551 (100.0)	776 (100.0)	1,054 (100.0)	5,866 (100.0)
2010. 8	상용 정규직	173 ( 11.6)	842 ( 28.9)	583 ( 52.1)	998 ( 57.5)	2,595 ( 35.7)
	상용 비정규직	164 ( 11.0)	312 ( 10.7)	172 ( 15.4)	221 ( 12.7)	868 ( 11.9)
	임시 정규직	378 ( 25.3)	737 ( 25.3)	175 ( 15.6)	187 ( 10.8)	1,477 ( 20.3)
	임시 비정규직	420 ( 28.1)	673 ( 23.1)	148 ( 13.2)	297 ( 17.1)	1,539 ( 21.2)
	일용 정규직	73 ( 4.9)	67 ( 2.3)	10 ( 0.9)	6 ( 0.3)	156 ( 2.1)
	일용 비정규직	285 ( 19.1)	285 ( 9.8)	33 ( 2.9)	28 ( 1.6)	630 ( 8.7)
	전 체	1,493 (100.0)	2,916 (100.0)	1,120 (100.0)	1,735 (100.0)	7,26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09년 3월과 2011년 3월 사이에는 전 학력에서 상용 정규직이 증가하는 차이가 있다. 상용 비정규직은 여전히 모든 학력에서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은 모든 학력에서 비중이 줄었고, 임시 비정규직은 고졸 미만에서만 증가가 뚜렷하고 나머지는 감소하는 모양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앞서 본 시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부표 2 참조).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가 뚜렷하다. 30대와 40대에선 상용 비정규직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50세 이상은 증가폭이 컸다. 또한, 다른 연령대는 일용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은 숫자로는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과 30대에서 감소했고, 40대와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비중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연령대로 볼 때 줄어드는 임시 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범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일용직도 마찬가지다. 일용직 숫자의 감소는 5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50세 이상이 나머지 연령대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50세 이상에서도 비중은 4%p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서도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상용 정규직 비중은 무려 18.9%p나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는 상용 정규직이 상용 비정규직보다 숫자로 볼 때 더 많이 증가했지만, 여성 30세 미만은 그렇지 않다. 상용 정규직은

<표 7> 연령별 남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2003. 8~2010. 8)

(단위: 천 명, %)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전 체
2003. 8	상용 정규직	796 ( 40.8)	1,797 ( 62.8)	1,261 ( 61.3)	578 ( 41.0)	4,433 ( 53.5)
	상용 비정규직	189 ( 9.7)	229 ( 8.0)	137 ( 6.7)	115 ( 8.1)	671 ( 8.1)
	임시 정규직	505 ( 25.8)	465 ( 16.2)	265 ( 12.9)	222 ( 15.7)	1,457 ( 17.6)
	임시 비정규직	198 ( 10.2)	173 ( 6.1)	91 ( 4.4)	191 ( 13.5)	653 ( 7.9)
	일용 정규직	50 ( 2.6)	22 ( 0.8)	14 ( 0.7)	21 ( 1.5)	107 ( 1.3)
	일용 비정규직	214 ( 11.0)	175 ( 6.1)	290 ( 14.1)	284 ( 20.1)	963 ( 11.6)
	전 체	1,952 (100.0)	2,861 (100.0)	2,058 (100.0)	1,411 (100.0)	8,283 (100.0)
2010. 8	상용 정규직	752 ( 44.6)	2,057 ( 67.6)	1,780 ( 66.9)	1,088 ( 45.4)	5,677 ( 58.0)
	상용 비정규직	204 ( 12.1)	292 ( 9.6)	184 ( 6.9)	329 ( 13.8)	1,010 ( 10.3)
	임시 정규직	361 ( 21.5)	412 ( 13.5)	284 ( 10.7)	255 ( 10.7)	1,313 ( 13.4)
	임시 비정규직	203 ( 12.1)	162 ( 5.3)	131 ( 4.9)	297 ( 12.4)	794 ( 8.1)
	일용 정규직	42 ( 2.5)	23 ( 0.8)	38 ( 1.4)	41 ( 1.7)	144 ( 1.5)
	일용 비정규직	122 ( 7.2)	95 ( 3.1)	243 ( 9.1)	385 ( 16.1)	845 ( 8.6)
	전 체	1,685 (100.0)	3,042 (100.0)	2,661 (100.0)	2,395 (100.0)	9,78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겨우 3천 명 증가했지만 상용 비정규직은 91천 명이나 증가했다. 50세 이상은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 비중은 7년 사이에 7.7%p나 떨어졌는데, 30대에서는 11.3%p나 떨어졌다. 임시 비정규직은 40대와 50세 이상에서는 비중과 숫자 모두 증가했다. 일용 비정규직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03년 50세 이상은 1/3이 일용 비정규직이었지만 2010년에는 16%만이 일용 비정규직이다. 국제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9년 3월과 2011년 3월 사이에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부표 4 참조).

지금까지 학력, 연령, 성별로 종사상 지위 증감 추이를 보았다. 각 집단 안에서 상용직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각 집단의 분포 변화로도 상용직이 증가할 수 있다. 각 집단 안에서 상용직 비중은 그대로지만, 상용직 비중이 높은 집단의 상대적 규모가 증가했을 때 전체 상용직 비중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것은 학력과 연령 집단이 고학력자 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상용직 증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남성의 경우 각 학력집단 안에서 상용직 비중 증가는 전체 남성에서의 상용직 비중 증가만큼 크지 않아 학력집단 분포변화의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각 연령집단 안에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해 연령 분포변화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연령집단 안에서도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져 왔고, 저학력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왔기 때문에 연령

<부표 8> 연령별 여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2003. 8 ~ 2010. 8)

(단위: 천 명, %)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전 체
2003. 8	상용 정규직	868 ( 40.4)	457 ( 31.4)	310 ( 23.2)	115 ( 12.5)	1,751 ( 29.8)
	상용 비정규직	197 ( 9.2)	87 ( 6.0)	62 ( 4.7)	35 ( 3.8)	382 ( 6.5)
	임시 정규직	549 ( 25.6)	400 ( 27.4)	443 ( 33.2)	250 ( 27.0)	1,643 ( 28.0)
	임시 비정규직	321 ( 14.9)	312 ( 21.4)	278 ( 20.8)	208 ( 22.5)	1,119 ( 19.1)
	일용 정규직	30 ( 1.4)	42 ( 2.9)	43 ( 3.2)	38 ( 4.1)	152 ( 2.6)
	일용 비정규직	182 ( 8.5)	160 ( 11.0)	199 ( 14.9)	279 ( 30.2)	819 ( 14.0)
	전 체	2,146 (100.0)	1,459 (100.0)	1,336 (100.0)	925 (100.0)	5,866 (100.0)
2010. 8	상용 정규직	871 ( 44.9)	863 ( 50.3)	583 ( 31.0)	279 ( 16.1)	2,595 ( 35.7)
	상용 비정규직	288 ( 14.8)	175 ( 10.2)	209 ( 11.1)	195 ( 11.3)	868 ( 11.9)
	임시 정규직	357 ( 18.4)	276 ( 16.1)	462 ( 24.6)	382 ( 22.1)	1,477 ( 20.3)
	임시 비정규직	272 ( 14.0)	311 ( 18.1)	432 ( 23.0)	524 ( 30.3)	1,539 ( 21.2)
	일용 정규직	27 ( 1.4)	16 ( 0.9)	41 ( 2.2)	72 ( 4.2)	156 ( 2.2)
	일용 비정규직	127 ( 6.5)	74 ( 4.3)	153 ( 8.1)	277 ( 16.0)	630 ( 8.7)
	전 체	1,942 (100.0)	1,714 (100.0)	1,879 (100.0)	1,729 (100.0)	7,26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연령의 설명력이 없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은 학력집단 안에서, 연령집단 안에서 모두 상용직 비중이 많이 증가해 남성과 달리 분포변화 설명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Oaxaca 분해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에서의 차이를 설명변수들의 분포변화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종속변수는 상용직 여부, 설명변수는 연령과 학력이다. 모형의 추정은 선형확률모형으로 한다. 선형확률모형은 평균적 변화를 추정할 때에는 매우 정확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포의 극단을 추정할 때에는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차이, 즉 시기간 상용직 비중의 차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Oaxaca 분해방법은 유사한 다른 분해방법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에 추가적인 변수를 투입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먼저 투입된 변수들과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Oaxaca and Ransom(1999)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변수를 조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변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연속형 변수에 변형이 발생하면 전체 차이에서 분포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기여분은 변동이 생긴다. 더미 변수를 이용할 경우 기준범주로 뭉 선택하나에 따라서 해당 변수의 분포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기여분이 변동한다. 다만, 어떤 범주를 선택해도 분포에 대한 효과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연속형 변수와는 달리 총 격차 중 총 차별 기여분과 총 분포 기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왔지만, 다소 임의적인 가정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개별 변수의 영향을 분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노동공급 측 요인이라 볼 수 있는 학력과 연령구조 변화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정 없이, 대신 개별 변수의 영향력은 보고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포변화의 설명력만 보고하는 것으로 방법론적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

<표 9>에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성별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의 상용직 비중 차이를 분해할 경우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는 전체 차이의 48.1%를 설명했다. 절반 가량을 학력과 연령 변화가 설명하는 셈이다. 남성에 국한해 분석을 하면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 설명력이 더 크게 증가해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 전체 상용직 증가의 6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과 2007년 8월을 비교하면 이와 같은 분포변화가 94.9%를 설명한다. 기간제법 발효와 내수침체가 있었던 2006년 8월과 2008년 8월 사이의 상용직 증가는 73.3%를 분포변화가 설명했다. 국제금융위기가 있는 2008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의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분포변화 설명력이 27%로 떨어졌지만, 회복기에 들어간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해 보면 분포 설명력이

52%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볼 때 급격한 경기변동이 있었던 2009년을 전후한 1~2년을 빼면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는 학력 및 연령구조 변화가 상용직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고학력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어서 상용직 증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선 학력과 연령 변화가 별 설명력이 없었다. 남성과 달리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는 상용직 변화의 20%도 설명하지 못했다. 남성과 유사하게 국제금융위기를

<표 9> Oaxaca 분해 결과

			전 체		남 성		여 성	
상 용 직 증 가	2003. 8 ~2010. 8	전체 차이	-0.0840		-0.0675		-0.1131	
		분포 차이	-0.0404	(48.1)	-0.0418	( 61.9)	-0.0149	( 13.2)
		분포 외 차이	-0.0436	(51.9)	-0.0257	( 38.1)	-0.0983	( 86.9)
	2003. 8 ~2007. 8	전체 차이			-0.0253		-0.0636	
		분포 차이			-0.0240	( 94.9)	-0.0097	( 15.3)
		분포 외 차이			-0.0012	( 4.7)	-0.0538	( 84.6)
	2006. 8 ~2008. 8	전체 차이			-0.0262		-0.0311	
		분포 차이			-0.0192	( 73.3)	-0.0055	( 17.7)
		분포 외 차이			-0.0070	( 26.7)	-0.0256	( 82.3)
	2008. 8 ~2010. 8	전체 차이			-0.0296		-0.0342	
		분포 차이			-0.0080	( 27.0)	0.0017	( -5.0)
		분포 외 차이			-0.0216	( 73.0)	-0.0359	(105.0)
2010. 3 ~2011. 3	전체 차이			-0.0075		-0.0372		
	분포 차이			-0.0039	( 52.0)	-0.0019	( 5.1)	
	분포 외 차이			-0.0036	( 48.0)	-0.0352	( 94.6)	
상 용 정 규 직 증 가	2003. 8 ~2010. 8	전체 차이	-0.0482		-0.0451		-0.0587	
		분포 차이	-0.0390	(80.9)	-0.0394	( 87.4)	-0.0158	( 26.9)
		분포 외 차이	-0.0092	(19.1)	-0.0057	( 12.6)	-0.0430	( 73.3)
	2003. 8 ~2007. 8	전체 차이			0.0151		-0.0216	
		분포 차이			-0.0220	-(145.7)	-0.0108	( 50.0)
		분포 외 차이			0.0371	(245.7)	-0.0108	( 50.0)
	2006. 8 ~2008. 8	전체 차이			-0.0310		-0.0354	
		분포 차이			-0.0172	( 55.5)	-0.0055	( 15.5)
		분포 외 차이			-0.0139	( 44.8)	-0.0299	( 84.5)
	2008. 8 ~2010. 8	전체 차이			-0.0266		-0.0140	
		분포 차이			-0.0074	( 27.8)	0.0009	-( 6.4)
		분포 외 차이			-0.0192	( 72.2)	-0.0150	(107.1)
2010. 3 ~2011. 3	전체 차이			0.0049		-0.0235		
	분포 차이			-0.0037	-( 75.5)	-0.0017	( 7.2)	
	분포 외 차이			0.0086	(175.5)	-0.0218	(92.8)	

전후한 시기의 설명력은 더 떨어진다. 상용직 전체가 아니라 상용 정규직의 증감을 보면 다소 설명력이 개선되지만, 2003년 8월에서 2007년 8월을 비교할 경우에만 절반 정도를 설명할 뿐 그 외의 시기에서는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 나갈지 말지를 선택할 여지가 크다.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60%대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에는 직종분리가 존재한다는 연구들도 많다. 남성보다 산업-직종 변화의 중요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남녀 차별의 개선이 그것이다. 남성과는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인사관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면 임시 정규직 같은 범주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인과 출산이 노동시장 참가(지속)결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연령대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다시 진입할 때에는 경력단절로 인해 이전에 일하던 사무직이나 전문직종 일자리로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경험의 프락시 역할을 하는데, 경력단절이 존재할 경우 여성에게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작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은 최종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시장에 들어가 일생을 보내야 하는 남성과 달리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력-연령구조 변화는 장기간의 변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닐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의 설득력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을 세분해 Oaxaca 분해를 해 보았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만혼화 현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만혼하는 여성은 대체로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해를 해 보면 분포 차이의 설명력이 47.1%로 증가한다. 상용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거의 84.4%까지 분포 차이 설명력이 증가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 보면 분포변화 설명력은 미미해진다. 상용직 기준 5.7%, 상용직 기준 11.9%만을 설명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5세 미만, 35~44세에서는 비교적 분포변화의 설명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5세 이상에서는 14.6%로 뚝 떨어졌다. 상용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 분포변화 설명력이 고르게 40%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연령구간을 나누어 각 집단별로 분해하면 분포변화 설명력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구간을 나누지 않고 분해하면 설명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작용하는 방식이 각 연령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을 나누어 보면 분포 차이가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성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남성 상용직은 대체로 임금분포로 보면 중상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표 10> 여성 집단별 Oaxaca 분해 결과: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상용직 비중 차이

		미혼	기혼	35세 미만	35~44세	45세 이상
상용직	전체 차이	-0.0995	-0.1502	-0.1406	-0.1873	-0.1162
	분포 차이	-0.0469 (47.1)	-0.0086 ( 5.7)	-0.0531 (37.8)	-0.0597 (31.8)	-0.0170 (14.6)
	분포 외 차이	-0.0526 (52.9)	-0.1416 (94.3)	-0.0875 (62.2)	-0.1277 (68.2)	-0.0991 (85.4)
상용 정규직	전체 차이	-0.0491	-0.0925	-0.0932	-0.1291	-0.0401
	분포 차이	-0.0414 (84.4)	-0.0110 (11.9)	-0.0442 (47.4)	-0.0546 (42.3)	-0.0228 (56.8)
	분포 외 차이	-0.0077 (15.6)	-0.0815 (88.1)	-0.0490 (52.6)	-0.0745 (57.7)	-0.0173 (43.2)

<표 11> 임금수준을 고려했을 때의 여성 Oaxaca 분해 결과: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상용직 비중 차이

		여성 전체	
중위임금 이상 상용직	전체 차이	-0.058	
	분포 차이	-0.036	( 62.6)
	분포 외 차이	-0.022	( 37.4)
중위임금 미만 상용직	전체 차이	-0.055	
	분포 차이	0.021	(-38.4)
	분포 외 차이	-0.077	(138.4)

여성 상용직은 모든 임금분포에 고루 퍼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음 절 참조). 즉 남성 상용직의 일자리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근로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 상용직은 나쁜 근로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고학력자는 주로 좋은 일자리를 선호할 것인데, 나쁜 일자리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면 학력효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여성 상용직을 중위임금 이상 상용직과 중위임금 미만 상용직으로 나누어 Oaxaca 분해를 해 보았다. <표 11>에 그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중위임금 이상 상용직에 대해서는 분포효과가 확연히 커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중위임금 미만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분포효과가 (-)가 나와 고학력화는 중위임금 미만 상용직 감소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Oaxaca 분해를 통해 임금근로자 안에서 학력과 연령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 상용직 비중 증가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남성 상용직 비중 증가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상용직 증가는 학력과 연령 분포 변화의 설명력이 작았는데, 이는 여성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남성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집단에서는 그리고 어떤 상용직 일자리냐에 따라서는 여성에서도 학력과 연령 분포 변화가 상당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상용직 비중 증가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체 특성 자료를 활용해 중사

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로 범주를 구분할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해 왔는지 좀 더 분석해 보겠다.

#### IV. 사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별 증감

지난 10년 넘게 전문가, 사무직, 단순노무 직종은 숫자로 볼 때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추세이고 나머지 직종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다.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 별로 보면, 상용 정규직은 2004년 8월과 2010년 8월 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전 직종에서 증가했다. 상용 비정규직은 전문가, 서비스, 판매, 기능원, 단순노무직에서 늘었고 사무직, 기계조작 등에서 줄었다. 다른 직종에서는 상용 정규직의 증가 숫자가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보다 컸지만, 단순노무직에서만만큼은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가 컸다.

단순노무직이 상용 비정규직에서 증가한 것은 주로 파견·용역의 증가가 원인이다. 같은 시기 단순노무직에서 파견·용역은 약 28만 명 늘었다. 일용 비정규직에서의 감소는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단순노무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파견·용역, 시간제가 단순노무직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단순노무 일자리가 파견·용역, 시간제 형태로 대체되는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1개월 미만일지라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 공식화된 고용관계 안에서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자리가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일일근로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제는 279천 명 감소했지만 일일근로는 이에 못 미치는 123천 명만 증가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sup>1)</sup> 임시 비정규직에서 단순노무직은 273천 명 늘었는데 이 중 217천 명은 시간제에서 증가한 것이다. 임시 정규직에서는 105천 명 증가했다.<sup>2)</sup>

- 1) 일일근로는 단순노무직에서 같은 기간에 30세 미만은 30천 명에서 23천 명으로 감소했고 30대도 69천 명에서 46천 명으로 감소했으나, 40대는 85천 명에서 113천 명으로 증가했고 50세 이상도 136천 명에서 261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제는 30세 미만이 42천 명에서 14천 명으로, 30대는 5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40대 87천 명에서 12천 명으로, 50세 이상 156천 명에서 27천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 2) 2009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하면, 상용직 중심의 증가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지만, 상용직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2003~2010년 비교에서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하면 상용 정규직 증가가 상용 비정규직 증가보다 컸지만, 이 시기에는 사무직, 기계조작 등을 제외하면 모두 상용 비정규직에서의 증가가 컸다. 심지어 전문가 직종에서도 상용 정규직은 101천 명 늘었는데 상용 비정규직은 166천 명 늘었다.

<표 12> 직업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증감(2004년 8월과 2010년 8월)

(단위: 천 명)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관리자	202	327	43	43	7	12	6	6	-	-	-	-
전문가	1,547	2,415	400	454	352	371	377	430	2	1	17	18
사무직	2,047	2,621	438	367	336	282	236	241	6	3	39	35
서비스	222	378	77	164	509	502	224	252	75	75	246	177
판매	241	347	97	101	440	401	404	503	24	26	136	96
농업숙련	7	10	5	3	10	16	5	13	1	7	26	18
기능원 등	451	614	115	152	397	351	146	81	40	45	476	388
기계조작 등	1,048	1,187	230	181	343	299	129	89	23	20	65	44
단순노무직	323	372	208	415	451	556	443	716	86	124	808	699
전 체	6,088	8,272	1,612	1,878	2,844	2,790	1,969	2,332	258	300	1,813	1,4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3> 업종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증감(2004년 8월과 2010년 8월)

(단위: 천 명)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농림어업	15	12	2	15	15	26	9	23	5	13	97	82
광업	7	14	2	2	2	3	0	0	1		1	1
제조업	1,971	2,371	379	271	649	533	185	116	61	58	252	132
전기가스·증기·수도	52	68	7	6	1	1	8	0	0		1	1
하수·원료재생·복원	25	42	8	9	7	6	1	4	1	0	1	1
건설업	287	479	71	70	163	155	93	65	27	35	658	584
도매 및 소매업	489	758	143	115	632	576	326	348	41	60	187	160
운수업	340	457	85	49	99	114	58	38	9	7	32	29
숙박 및 음식점업	61	120	30	37	471	498	184	202	78	82	238	195
출판·영상 등	322	436	112	87	47	36	47	30	2	3	12	8
금융 및 보험업	352	431	101	66	30	31	194	244	1		7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	108	41	66	67	83	59	61	2	1	15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75	550	96	91	74	57	29	24	1	2	9	11
사업서비스	99	165	207	503	41	49	215	229	8	3	88	74
공공행정 등	580	630	40	33	6	10	81	274	1	0	50	17
교육서비스업	584	709	134	190	173	167	298	334	1	1	18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310	577	92	194	91	139	45	183	1	5	10	2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36	69	18	27	48	52	30	43	11	12	31	26
협화단체·수리·기타	184	265	39	46	209	211	82	72	6	12	52	52
가구내 및 자가			0		20	44	25	40	3	5	57	50
국제 및 외국기관	17	11	6	2	1	1	1					
전 체	6,088	8,272	1,612	1,878	2,844	2,790	1,969	2,332	258	300	1,813	1,4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4> 규모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증감(2004년 8월과 2010년 8월)

(단위: 천 명)

	상용 정규직		상용 비정규직		임시 정규직		임시 비정규직		일용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2004. 8	2010. 8
5인 미만	200	484	47	159	1,110	1,112	519	596	127	142	806	702
5~9인	608	958	189	257	730	779	369	416	66	77	485	419
10~29인	1,305	1,850	377	510	605	567	488	629	31	54	345	249
30~99인	1,627	2,120	458	545	265	251	389	481	22	14	114	74
100~299인	955	1,258	283	222	90	56	118	108	6	10	37	21
300인 이상	1,393	1,602	258	185	46	25	86	102	6	4	26	11
전 체	6,088	8,272	1,612	1,878	2,844	2,790	1,969	2,332	258	300	1,813	1,4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상용 정규직이 증가했다. 상용 비정규직은 업종별로 편차가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는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업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용 비정규직 증가 중 많은 부분이 파견·용역 증가로 설명되는데, 사업서비스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용 비정규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도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은 대체로 감소했고, 증가한 업종들이 일부 있지만 대개 소폭에 그쳤다. 임시 비정규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 14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행정에서도 19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주로 2009년 이후 현상이어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여파로 보인다. 일용직도 대체로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에서 미미한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전 규모에서 상용 정규직 중심의 성장이 있었다. 상용 비정규직은 100~299인, 300인 이상에서 감소했고, 나머지는 증가했다. 임시 정규직은 5인 미만, 5~9인에서만 소폭 증가했으며, 임시 비정규직은 100~299인만 빼고 모두 증가했다. 일용 정규직은 30인 미만에서 소폭 증가했고, 일용 비정규직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다.<sup>3)</sup>

마지막으로 임금수준별로 각 범주의 임금근로자 증감을 비교해 보았다.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을 초과하는 임금,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 중간임금은 고임금과 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였다. 해석상 주의할 점이

3)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차이가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 증가폭이 대단히 작는데, 그나마도 상용 정규직이 아니라 상용 비정규직에서 늘었다. 상용 정규직 중심으로 증가한 앞서와는 다른 것이다. 30~99인도 상용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상용 정규직보다 컸다. 임시 정규직은 이전과 대동소이하지만, 임시 비정규직은 5인 미만, 30~99인만 빼고 감소했다. 100인 이상에서 감소했던 이전과는 다른 것이다. 일용직은 대체로 감소해 이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있다. 중위임금은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인데,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상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중위임금 미만이 50%나 49.9%가 아니라 47%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다. 때로 52%가 될 수도 있다. 중위임금만이 아니라 저임금 상한, 고임금 하한 모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인원수 증감을 계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4) 따라서 숫자의 증감을 보지

<표 15> 임금수준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변화

(단위: 천 명, %)

		2003. 8	2010. 8	2009. 3	2011. 3
저임금	상용 정규직	450 ( 11.6)	538 ( 12.0)	440 ( 10.7)	494 ( 12.0)
	상용 비정규직	171 ( 4.4)	440 ( 9.8)	243 ( 5.9)	430 ( 10.5)
	임시 정규직	1,328 ( 34.1)	1,323 ( 29.5)	1,240 ( 30.1)	1,172 ( 28.6)
	임시 비정규직	747 ( 19.2)	1,098 ( 24.5)	954 ( 23.2)	956 ( 23.3)
	일용 정규직	177 ( 4.5)	216 ( 4.8)	224 ( 5.4)	207 ( 5.0)
	일용 비정규직	1,021 ( 26.2)	868 ( 19.4)	1,014 ( 24.6)	845 ( 20.6)
	전 체	3,895 (100.0)	4,482 (100.0)	4,114 (100.0)	4,103 (100.0)
중간	상용 정규직	2,687 ( 41.9)	3,774 ( 47.8)	3,566 ( 46.9)	3,879 ( 48.2)
	상용 비정규직	564 ( 8.8)	1,074 ( 13.6)	870 ( 11.4)	1,199 ( 14.9)
	임시 정규직	1,602 ( 25.0)	1,371 ( 17.4)	1,393 ( 18.3)	1,292 ( 16.0)
	임시 비정규직	808 ( 12.6)	1,022 ( 12.9)	1,091 ( 14.3)	1,036 ( 12.9)
	일용 정규직	79 ( 1.2)	82 ( 1.0)	90 ( 1.2)	94 ( 1.2)
	일용 비정규직	679 ( 10.6)	574 ( 7.3)	600 ( 7.9)	556 ( 6.9)
	전 체	6,419 (100.0)	7,897 (100.0)	7,611 (100.0)	8,056 (100.0)
고임금	상용 정규직	3,046 ( 79.5)	3,960 ( 84.8)	3,680 ( 84.6)	4,072 ( 83.0)
	상용 비정규직	317 ( 8.3)	365 ( 7.8)	374 ( 8.6)	469 ( 9.6)
	임시 정규직	170 ( 4.4)	95 ( 2.0)	63 ( 1.4)	83 ( 1.7)
	임시 비정규직	217 ( 5.7)	212 ( 4.5)	200 ( 4.6)	244 ( 5.0)
	일용 정규직	2 ( 0.1)	3 ( 0.1)	6 ( 0.1)	3 ( 0.1)
	일용 비정규직	82 ( 2.1)	33 ( 0.7)	28 ( 0.6)	36 ( 0.7)
	전 체	3,834 (100.0)	4,668 (100.0)	4,350 (100.0)	4,906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4)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설문조사이다. 아무래도 응답하기 싫은 내용을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을 얘기해야만 할 때 정확한 임금이 201만 원일 때 200만 원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는 문헌에서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 히핑 오차(hipping error)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중위임금이나 중위임금의 2/3 임금 같은 경계선에 수천 수만 명이 분포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임금격차를 연구할 때 저임금자 몇 명 감소 식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거나 장기시계열 상에서 뚜렷이 변화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위험하다.

말고 비중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고 있는지 정도의 정보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할 때 상용 정규직은 고임금과 중간임금 계층에서 비중이 많이 증가했으며, 저임금 계층에서는 약간 증가했다. 상용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중간임금 계층에서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 고임금 쪽에서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상용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시점에서는 중간임금 > 고임금 > 저임금 순으로 많았는데, 2010년 8월 시점에서는 중간임금 > 저임금 > 고임금 순으로 많아졌다. 이와 같이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은 움직임이 달랐다.

<표 16> 남성 임금수준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변화

(단위: 천 명, %)

		2003. 8	2010. 8	2009. 3	2011. 3
저임금	상용 정규직	146 ( 11.4)	202 ( 12.7)	151 ( 10.3)	187 ( 12.7)
	상용 비정규직	87 ( 6.8)	185 ( 11.6)	112 ( 7.6)	157 ( 10.6)
	임시 정규직	370 ( 28.9)	395 ( 24.8)	362 ( 24.8)	376 ( 25.4)
	임시 비정규직	236 ( 18.5)	346 ( 21.7)	327 ( 22.4)	320 ( 21.7)
	일용 정규직	56 ( 4.4)	81 ( 5.1)	71 ( 4.9)	74 ( 5.0)
	일용 비정규직	384 ( 30.0)	385 ( 24.2)	439 ( 30.0)	365 ( 24.7)
	전 체	1,279 (100.0)	1,594 (100.0)	1,462 (100.0)	1,478 (100.0)
중간	상용 정규직	1,759 ( 44.8)	2,238 ( 50.0)	2,124 ( 48.8)	2,206 ( 49.7)
	상용 비정규직	310 ( 7.9)	536 ( 12.0)	463 ( 10.7)	595 ( 13.4)
	임시 정규직	955 ( 24.3)	842 ( 18.8)	812 ( 18.7)	765 ( 17.2)
	임시 비정규직	332 ( 8.5)	368 ( 8.2)	425 ( 9.8)	390 ( 8.8)
	일용 정규직	48 ( 1.2)	61 ( 1.4)	69 ( 1.6)	68 ( 1.5)
	일용 비정규직	525 ( 13.4)	433 ( 9.7)	456 ( 10.5)	415 ( 9.4)
	전 체	3,929 (100.0)	4,477 (100.0)	4,349 (100.0)	4,440 (100.0)
고임금	상용 정규직	2,528 ( 82.2)	3,237 ( 87.2)	3,035 ( 86.8)	3,328 ( 85.2)
	상용 비정규직	273 ( 8.9)	290 ( 7.8)	302 ( 8.6)	383 ( 9.8)
	임시 정규직	132 ( 4.3)	77 ( 2.1)	52 ( 1.5)	70 ( 1.8)
	임시 비정규직	85 ( 2.8)	80 ( 2.2)	81 ( 2.3)	98 ( 2.5)
	일용 정규직	2 ( 0.1)	3 ( 0.1)	6 ( 0.2)	3 ( 0.1)
	일용 비정규직	54 ( 1.8)	27 ( 0.7)	21 ( 0.6)	27 ( 0.7)
	전 체	3,074 (100.0)	3,712 (100.0)	3,497 (100.0)	3,90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임시 정규직은 모든 임금 계층에서 비중이 감소했다. 임시 비정규직은 저임금 쪽에서는 비중이 증가했고, 중간임금 계층에서도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에서는 숫자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일용 정규직, 비정규직은 모든 임금 계층에서 비중이 감소했다. 2009년 3월과 2011년 3월 사이에도 유사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아도 전체 추세는 다르지 않다. 다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전체 상용직의 절반 이상이 중간임금 계층에 몰려 있어 증가폭도 중간임금 계층에서 컸다. 상용 비정규직은 남성보다 훨씬 확연하게 중간과 저임금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체 특성별로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교차할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보면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업종, 직종,

<표 17> 여성 임금수준별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변화

(단위: 천 명, %)

		2003. 8	2010. 8	2009. 3	2011. 3
저임금	상용 정규직	304 ( 11.6)	335 ( 11.6)	290 ( 10.9)	306 ( 11.7)
	상용 비정규직	84 ( 3.2)	255 ( 8.8)	131 ( 4.9)	274 ( 10.4)
	임시 정규직	958 ( 36.6)	929 ( 32.1)	878 ( 33.1)	796 ( 30.3)
	임시 비정규직	511 ( 19.5)	752 ( 26.0)	627 ( 23.6)	635 ( 24.2)
	일용 정규직	121 ( 4.6)	135 ( 4.7)	152 ( 5.7)	133 ( 5.1)
	일용 비정규직	637 ( 24.4)	483 ( 16.7)	575 ( 21.7)	480 ( 18.3)
	전 체	2,616 (100.0)	2,889 (100.0)	2,653 (100.0)	2,625 (100.0)
중간	상용 정규직	928 ( 37.3)	1,536 ( 44.9)	1,442 ( 44.2)	1,673 ( 46.3)
	상용 비정규직	254 ( 10.2)	538 ( 15.7)	407 ( 12.5)	604 ( 16.7)
	임시 정규직	647 ( 26.0)	530 ( 15.5)	581 ( 17.8)	527 ( 14.6)
	임시 비정규직	476 ( 19.1)	654 ( 19.1)	666 ( 20.4)	646 ( 17.9)
	일용 정규직	31 ( 1.2)	22 ( 0.6)	21 ( 0.6)	25 ( 0.7)
	일용 비정규직	155 ( 6.2)	141 ( 4.1)	144 ( 4.4)	141 ( 3.9)
	전 체	2,490 (100.0)	3,420 (100.0)	3,261 (100.0)	3,616 (100.0)
고임금	상용 정규직	518 ( 68.2)	723 ( 75.7)	645 ( 75.6)	744 ( 74.6)
	상용 비정규직	44 ( 5.7)	75 ( 7.9)	72 ( 8.4)	86 ( 8.6)
	임시 정규직	38 ( 5.0)	18 ( 1.9)	11 ( 1.3)	13 ( 1.3)
	임시 비정규직	132 ( 17.4)	132 ( 13.8)	119 ( 13.9)	146 ( 14.7)
	일용 정규직	0 ( 0.0)	( 0.0)	( 0.0)	( 0.0)
	일용 비정규직	27 ( 3.6)	6 ( 0.7)	7 ( 0.8)	9 ( 0.9)
	전 체	760 (100.0)	956 (100.0)	854 (100.0)	998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사업체 규모,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도 다른 양태를 보여 구분되는 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임시 정규직과 임시 비정규직도 구분되는 범주로 보인다. 임시 정규직은 어떤 특성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임시 비정규직은 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추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임시 비정규직은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이라는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임시 정규직과 반대로 증가했다. 일용 비정규직과 일용 정규직은 사업체 특성별로 볼 때 뚜렷한 차이가 없어 하나의 범주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지난 7-8년간 지속되어 온 상용직 증가는 고학력화, 저학력 집단의 고연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비중이 높은 고학력 집단의 노동시장 내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변화가 없어도 상용직 비중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상용직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뜻이다.

다만, 여성보다는 남성 상용직 증가를 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에게서도 고학력화가 진행 중이지만, 여러 분석을 해본 결과 여성 노동시장 참가에는 남성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학력변화의 영향이 희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용직 증가가 주로 상용 정규직 중심이고, 고임금 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과 달리 여성 상용직 증가에서는 상용 비정규직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중간임금 계층이나 저임금 계층을 많이 포함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즉 비교적 고학력자가 선호할 만한 일자리 비중이 상용직 중 높은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그런 일자리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상용직 일자리 중 많은 것이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한 가지 원인이라는 뜻이다.

고학력화가 상용직 증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상용직 증가처럼 전체 상용직 증가를 전부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별로 설명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교차해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용직은 안정적인 임금에 고용불안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다. 상용직 안에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규모가 커졌고, 이러한 규모 증가는 파견 용역직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 정규직은 전문가, 사무직 중에서 많이 증가했고, 상용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직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점도 상용직이

모두 같은 상용직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상용 정규직은 모든 업종에서 고루 증가했다면, 상용 비정규직은 사업서비스 같은 몇 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차이도 발견되었다.

둘째, 일용 비정규직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초단기 계약을 하는 일용직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비경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상용 비정규직이나 임시 비정규직, 일일근로 등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임시직 비중 축소에서는 임시 비정규직이 아니라 임시 정규직 감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시 정규직은 기간 계약 없이 고용되었으나 공식적인 인사관리의 범위 밖에 있는 고용형태로서 제도가 제 역할을 한다면 정의상 있을 수 없는 고용형태이다. 전 산업, 전 직종,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상용직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용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보다 더 많이, 큰 규모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은 이런 추론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물론, 제도화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용직화된 임시 정규직은 주로 고학력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범주의 축소가 제도화를 통한 상용 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지는 경찰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KLI**

#### <참고문헌>

성재민(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노동리뷰』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이시균(2007), 「한국노동시장의 비공식 고용」,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황덕순(2010), 「최근의 상용직 근로자 증가 실태분석」,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Oaxaca, Ronald L. and Michael R. Ransom(1999), "Identification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1), pp.154-157.

<부표 1> 남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학력별 증감(2009.3~2011.3)

(단위: 천 명, %)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2009.3	상용 정규직	262 ( 22.8)	1,774 ( 47.9)	801 ( 64.0)	2,473 ( 77.2)	5,309 ( 57.0)
	상용 비정규직	99 ( 8.6)	289 ( 7.8)	150 ( 12.0)	341 ( 10.6)	878 ( 9.4)
	임시 정규직	201 ( 17.5)	687 ( 18.6)	164 ( 13.1)	174 ( 5.4)	1,226 ( 13.2)
	임시 비정규직	185 ( 16.1)	389 ( 10.5)	83 ( 6.6)	176 ( 5.5)	833 ( 8.9)
	일용 정규직	47 ( 4.1)	87 ( 2.4)	4 ( 0.3)	8 ( 0.2)	147 ( 1.6)
	일용 비정규직	353 ( 30.8)	477 ( 12.9)	50 ( 4.0)	34 ( 1.1)	915 ( 9.8)
	전 체	1,147 (100.0)	3,703 (100.0)	1,252 (100.0)	3,206 (100.0)	9,307 (100.0)
2011.3	상용 정규직	265 ( 22.8)	1,815 ( 48.3)	930 ( 68.2)	2,711 ( 76.5)	5,721 ( 58.2)
	상용 비정규직	136 ( 11.7)	409 ( 10.9)	157 ( 11.5)	432 ( 12.2)	1,134 ( 11.5)
	임시 정규직	199 ( 17.1)	667 ( 17.7)	158 ( 11.6)	187 ( 5.3)	1,210 ( 12.3)
	임시 비정규직	195 ( 16.8)	377 ( 10.0)	74 ( 5.5)	162 ( 4.6)	808 ( 8.2)
	일용 정규직	45 ( 3.9)	73 ( 1.9)	15 ( 1.1)	11 ( 0.3)	144 ( 1.5)
	일용 비정규직	321 ( 27.6)	416 ( 11.1)	28 ( 2.0)	42 ( 1.2)	807 ( 8.2)
	전 체	1,162 (100.0)	3,756 (100.0)	1,363 (100.0)	3,544 (100.0)	9,825 (100.0)
증감	상용 정규직	4	41	129	238	412
	상용 비정규직	38	121	7	91	257
	임시 정규직	-2	-21	-6	13	-15
	임시 비정규직	11	-12	-9	-14	-25
	일용 정규직	-2	-14	11	3	-2
	일용 비정규직	-33	-61	-23	8	-108
	전 체	15	54	111	339	5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여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학력별 증감(2009.3~2011.3)

(단위: 천 명, %)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2009.3	상용 정규직	158 ( 11.5)	738 ( 27.1)	557 ( 50.9)	925 ( 58.5)	2,377 ( 35.1)
	상용 비정규직	90 ( 6.5)	201 ( 7.4)	149 ( 13.6)	170 ( 10.8)	610 ( 9.0)
	임시 정규직	356 ( 25.9)	736 ( 27.1)	206 ( 18.8)	172 ( 10.9)	1,470 ( 21.7)
	임시 비정규직	329 ( 23.9)	659 ( 24.3)	145 ( 13.3)	278 ( 17.6)	1,412 ( 20.9)
	일용 정규직	88 ( 6.4)	71 ( 2.6)	6 ( 0.6)	8 ( 0.5)	173 ( 2.6)
	일용 비정규직	356 ( 25.9)	311 ( 11.5)	31 ( 2.8)	27 ( 1.7)	726 ( 10.7)
	전 체	1,376 (100.0)	2,717 (100.0)	1,094 (100.0)	1,582 (100.0)	6,768 (100.0)
2011.3	상용 정규직	186 ( 12.9)	840 ( 29.6)	634 ( 54.4)	1,063 ( 59.2)	2,723 ( 37.6)
	상용 비정규직	173 ( 12.0)	342 ( 12.1)	191 ( 16.4)	258 ( 14.4)	964 ( 13.3)
	임시 정규직	345 ( 23.9)	659 ( 23.3)	166 ( 14.2)	167 ( 9.3)	1,336 ( 18.5)
	임시 비정규직	366 ( 25.3)	637 ( 22.5)	143 ( 12.3)	282 ( 15.7)	1,428 ( 19.7)
	일용 정규직	76 ( 5.3)	73 ( 2.6)	3 ( 0.3)	6 ( 0.3)	159 ( 2.2)
	일용 비정규직	298 ( 20.6)	284 ( 10.0)	28 ( 2.4)	21 ( 1.2)	629 ( 8.7)
	전 체	1,443 (100.0)	2,835 (100.0)	1,165 (100.0)	1,797 (100.0)	7,239 (100.0)
증감	상용 정규직	29	102	77	138	346
	상용 비정규직	84	141	42	88	354
	임시 정규직	-11	-77	-40	-6	-134
	임시 비정규직	37	-22	-2	4	16
	일용 정규직	-12	2	-3	-2	-14
	일용 비정규직	-59	-28	-4	-6	-97
	전 체	67 ( 0 )	118	71	215	4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연령별 남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2009.3~2011.3)

(단위: 천 명, %)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전 체
2009.3	상용 정규직	765 ( 46.3)	1,979 ( 65.0)	1,628 ( 64.9)	938 ( 44.6)	5,309 ( 57.0)
	상용 비정규직	209 ( 12.7)	296 ( 9.7)	159 ( 6.3)	214 ( 10.2)	878 ( 9.4)
	임시 정규직	336 ( 20.4)	388 ( 12.7)	245 ( 9.8)	258 ( 12.3)	1,226 ( 13.2)
	임시 비정규직	188 ( 11.4)	184 ( 6.0)	159 ( 6.3)	302 ( 14.3)	833 ( 8.9)
	일용 정규직	33 ( 2.0)	35 ( 1.1)	34 ( 1.4)	45 ( 2.1)	147 ( 1.6)
	일용 비정규직	120 ( 7.2)	165 ( 5.4)	283 ( 11.3)	348 ( 16.5)	915 ( 9.8)
	전 체	1,650 (100.0)	3,046 (100.0)	2,507 (100.0)	2,104 (100.0)	9,307 (100.0)
2011.3	상용 정규직	765 ( 46.6)	2,043 ( 66.3)	1,817 ( 67.8)	1,097 ( 45.2)	5,721 ( 58.2)
	상용 비정규직	208 ( 12.7)	378 ( 12.3)	207 ( 7.7)	341 ( 14.1)	1,134 ( 11.5)
	임시 정규직	318 ( 19.4)	372 ( 12.1)	256 ( 9.6)	264 ( 10.9)	1,210 ( 12.3)
	임시 비정규직	197 ( 12.0)	159 ( 5.2)	138 ( 5.2)	314 ( 12.9)	808 ( 8.2)
	일용 정규직	45 ( 2.8)	22 ( 0.7)	33 ( 1.2)	44 ( 1.8)	144 ( 1.5)
	일용 비정규직	107 ( 6.5)	107 ( 3.5)	229 ( 8.6)	365 ( 15.0)	807 ( 8.2)
	전 체	1,639 (100.0)	3,081 (100.0)	2,681 (100.0)	2,424 (100.0)	9,825 (100.0)
증감	상용 정규직	0	64	189	159	412
	상용 비정규직	-1	82	48	127	257
	임시 정규직	-18	-16	12	6	-15
	임시 비정규직	9	-25	-20	12	-25
	일용 정규직	12	-12	-1	-1	-2
	일용 비정규직	-13	-59	-54	17	-108
	전 체	-11 ( 0 )	35	174	320	5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4> 연령별 여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여부별 비중 추이(2009.3~2011.3)

(단위: 천 명, %)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전 체
2009.3	상용 정규직	881 ( 46.0)	772 ( 46.0)	508 ( 28.8)	217 ( 15.4)	2,377 ( 35.1)
	상용 비정규직	234 ( 12.2)	159 ( 9.5)	113 ( 6.4)	104 ( 7.3)	610 ( 9.0)
	임시 정규직	389 ( 20.3)	331 ( 19.8)	425 ( 24.1)	325 ( 23.0)	1,470 ( 21.7)
	임시 비정규직	269 ( 14.0)	306 ( 18.3)	443 ( 25.1)	394 ( 27.8)	1,412 ( 20.9)
	일용 정규직	23 ( 1.2)	21 ( 1.2)	69 ( 3.9)	60 ( 4.3)	173 ( 2.6)
	일용 비정규직	120 ( 6.3)	87 ( 5.2)	205 ( 11.6)	314 ( 22.2)	726 ( 10.7)
	전 체	1,916 (100.0)	1,676 (100.0)	1,762 (100.0)	1,414 (100.0)	6,768 (100.0)
2011.3	상용 정규직	917 ( 48.5)	869 ( 51.0)	641 ( 33.7)	296 ( 17.1)	2,723 ( 37.6)
	상용 비정규직	284 ( 15.0)	220 ( 12.9)	246 ( 12.9)	214 ( 12.3)	964 ( 13.3)
	임시 정규직	314 ( 16.6)	234 ( 13.7)	417 ( 21.9)	372 ( 21.4)	1,336 ( 18.5)
	임시 비정규직	251 ( 13.3)	282 ( 16.5)	416 ( 21.8)	478 ( 27.5)	1,428 ( 19.7)
	일용 정규직	19 ( 1.0)	19 ( 1.1)	42 ( 2.2)	78 ( 4.5)	159 ( 2.2)
	일용 비정규직	106 ( 5.6)	80 ( 4.7)	143 ( 7.5)	299 ( 17.2)	629 ( 8.7)
	전 체	1,892 (100.0)	1,704 (100.0)	1,906 (100.0)	1,738 (100.0)	7,239 (100.0)
증감	상용 정규직	36	97	134	79	346
	상용 비정규직	50	60	133	111	354
	임시 정규직	-75	-97	-8	47	-134
	임시 비정규직	-18	-24	-27	85	16
	일용 정규직	-4	-2	-26	18	-14
	일용 비정규직	-14	-6	-61	-15	-97
	전 체	-24	28	144	324	4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